비리 사학 양산하는 '솜방망이 사학법'

광주 사립고교 채용비리 교직원 4년째 직위 그대로 유지
시교육청 해임 경고·검찰 고발에도 "강제적 행사 어려워"

교육당국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앞에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변조한 교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해임처분이 요구됐으나 해당 사학법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교육당국은 이를 강제하고, 조사할만한 권한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변조해 일부 응시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바꾼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B(6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14일부터 27일까지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채점 위원이 작성한 채점 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B씨의 전화 지시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16일부터 10월12일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2015년 10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이후 2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14일에서야 공소를 제기,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했음에도 교육청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A씨가 고발을 당한 이후부터 재판이 진행된 기간 동안 여전히 같은 업무를 4년 동안 이어 왔다는 점이다.

통상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거나 재판에 회부돼 계류중인 당사자의 경우 직위 해지를 해야 하나 해당 사학법인에서는 '직위 해지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시교육청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항소와 무관하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용권과 법인 이사회에 있어 시교육청에서 파면, 해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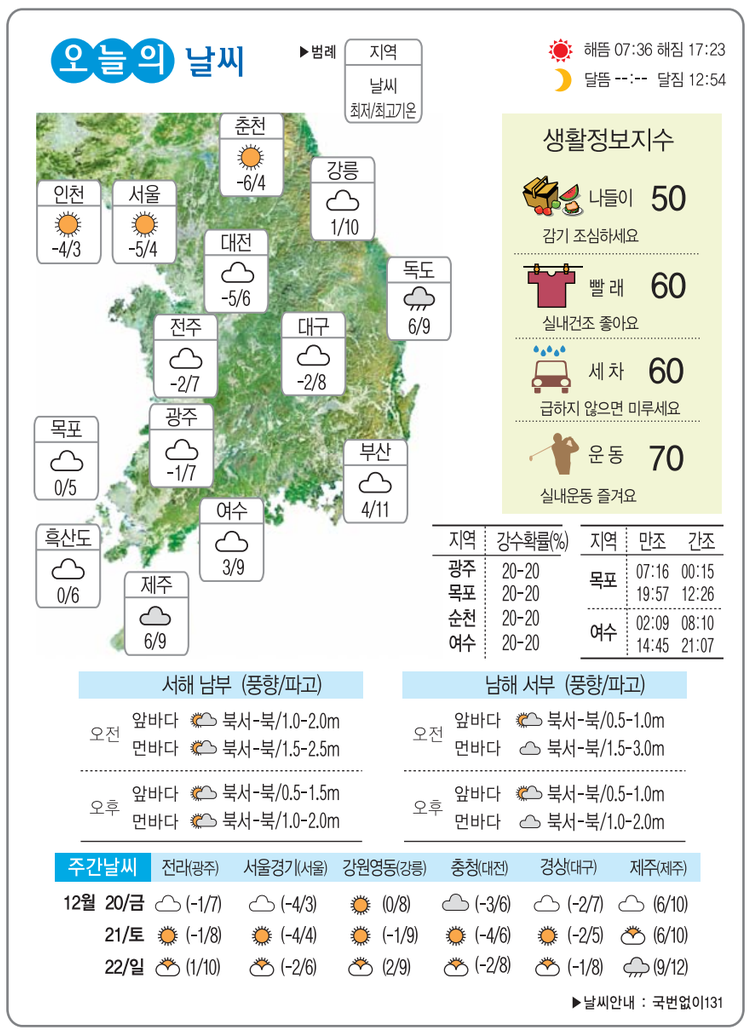
하지만, 시교육청의 경고에도 해당 사학법인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 시민단체 등은 사학 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한 공정한 교사 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사 채용과정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선의의 채용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며 "매년 위탁채용 비율이 높다곤 하나 학급수를 줄이는 등 유일한 제재조치를 행사해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징계권은 교육청에서 침해할 수 없는 부동의 제왕적 사학법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적발을 해놓고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다소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며, 위탁 채용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전남 특성화·마이스터고 공무원 합격자 대거 배출

국가직·지방직·부사관 총 110명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 성과

전남도교육청 산하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2019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11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전남도 33명, 도교육청 10명,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6명, 국세청 1명, 부사관 50여명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졸자들과의 경쟁에서 합격한 것이기에 의미가 더 크다.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공무원 합격을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지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서는 공무원반 운영, 면접시험 대비 등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펼쳐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목포여상고에서 2019년 국가직 9급 합격자 16명을 대상으로 사전 집합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임용 전 기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공직 입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문서 작성법, 직장 예절 등 공직 소양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앞으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한겨울에 수확한 상큼한 딸기 18일 오전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봉산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 작목반 관계자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수확한 새콤달콤한 겨울딸기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동구, 치매정책사업 우수운영기관 선정

최근 광주 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도 치매정책사업 우수사례 평가 결과 '우수운영기관'에 선정됐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치매안심마을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구는 그동안 관내 6개동(계림·1·2동, 산수1·2동, 지산1·2동)을 대상으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치매운영위원회 조직정비, 사업 체계구축 등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치매안심마을 내 행복아파트와 기억안심길을 조성하고 인지강화 환경조성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인지강화 벽화 ▲치매인식개선 경관조명 ▲배회방지를 위한 문패 ▲이웃 간 소통·나눔을 위한 우체통 ▲나눔텃밭 ▲건강정보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승지 기자

북구, 청소행정 예산절감 성과 '톡톡'

광주 북구가 청소행정 분야 예산절감 사례가 전국적인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북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로 세출절감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민선7기 들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추진방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대비 14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청소행정 분야의 업무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환준 기자